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구속연장 결정 '정치보복' 규정

박지원 "태극기부대와 투쟁선언한 것"

"삼권 분립 무시 · 재판 거부…바람직 하지 않아"

"세력 가지고 있어 보수층 결집에 영향 미칠 것"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한데 대해 "극소수 태극기부대와 정치투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했다.

박 전 대표는 1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제 법정투쟁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 한 말씀을 했다"며 "일반 국민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이 보수층의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일정한 소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 탈당 내지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충분하게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리라고 보고 있다"며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바른정당이) 11월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흡수가 된다'고 봤다.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은 분열의 길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탈당 또는 출당 없이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바른정당 통합파는 지방선거나 다음 정치 지형을 봐서 통합한다고 봐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당 조치되면 바른정당 일부에서는, 소위 통합파는 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실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올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옥중생활을 하게 하느냐와 그 지지 세력의 요구 등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쌓이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3선 할거냐" 야당, 박원순 집중공격

서울시 국정감사서 공세…더불어민주당은 엄호

지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3선 도전 여부 등을 추궁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에 박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엄호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지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안을)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소통에만 치중했다"며 "(민선 6기 처음) 2년은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4년은 수준 이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낙제 성적인데 3선 출마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3선을 한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 과연 시장으로서 자질이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가 초중고교에 배포한 사회적경제 관련 책자를 문제 삼으며 박 시장을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고 악랄하고 교묘하게 박원순·조희연식 경제관·이념·경제관을 주입하려는 것에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교과서가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장경제에 관한 생각이 정립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기 이에 관이 나서나"라며 "우리 아이들을 사회주의 경제론 신봉자로 만드는 박 시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까 염려스럽다"며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을 가장 먼저 고소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박 시장을 옹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원순 제압 시도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기가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는 한층 치밀해졌다. (박 시장을) 사전에 제압하라는 말은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쓰기에 섬뜩한 표현이다. 군사용어를 방불케 하는 제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박 시장의 경남지사 차출설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겨냥, "박 시장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당의 성동격서 전술이라 생각한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서 시민이 (3선 도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선 도전 여부에 관해 유보적인 답변을 하는 등 신중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와 관련해 "국정원이 더이상 국내정치에 개입 못하게 하고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증거가 있다"며 "그 핵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3선 도전 여부에 관해선 "(3선 도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국감이나 서울시정이 엄중하므로 서울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지금까지 직책에 대한 것보다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해왔다. 내가 3선을 하느냐 마느냐는 서울시민들에게도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호영 "통합파, 국감 후 전대 전 탈당 가능성 ↑"

"통추위 구성 논의돼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통합파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에는 (탈당) 하지 않는 대신 전당대회 전까지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기간은 11월8일까지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파의 이른바 보수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 위원 구성 제안에 대해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인지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김영우 최고위원에게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정식안건으로 요청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공식기구에서 결정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성립되든 성립되지 않든 (통추위 구성은)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최고위원들의 의견이나 태도로 봐서는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통추위원 지명 안건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문표 "서청원 · 최경환, 탈당 안하면 절차 밟을 것"

"국정농단 책임 결단 필요"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과 관련해 "자진탈당 하지 않으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홍 총장은 "그분들은 정치를 오래 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이럴 때 용단을 내리고, 덕을 좀 베풀어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그분들의 결단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거듭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출당은) 어렵지만 그것은 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과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 부분은 어떤 행태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주 정도에 큰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